

민주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

정 상 희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 정 식 (정책네트워크실 실장)

민주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

정상희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 실장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 요약	1
Ⅰ 제안 배경	3
Ⅱ 민주당 사회적경제 활동현황	4
Ⅲ 민주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방안	8
1. 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조직 정비 및 역할 강화	
2. 민주당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평가 인센티브 부여	
4.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표목차

〈표 1〉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지표	13
〈표 2〉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반영 세부 평가지표	13

요 약



최근 우리 사회 고용불안·양극화 등의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추진하는 등 사회적경제는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 관련 선거공약 제시, 사회적경제 당정청 협의회 개최, 민주연구원 산하 사회적경제센터 설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년 8·25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강령 본문에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공동체 발전’ 항목을 신설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조직 정비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당 강령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당규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내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주관하는 당·정·청 협의회 정례화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당 사무처에 독립부서를 두거나 자치분권국 내에 전담 부국장제 도입을 통한 상근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를 상설기구로 의무화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당 사회적경제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당연직 회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임원 및 회원은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임원 및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성과 홍보 및 확산을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위한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평가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 활동 실적을 당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경제 활동과 관련한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 3법 제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 지원의 투-트랙(two track)으로 접근하는 입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조례제정의 경우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당원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당 및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현장 기반의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민주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



정 상 희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 정 식 (정책네트워크실 실장)

I 제안 배경

-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고용불안양극화 등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문제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문제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선정하고 청와대 비서실에 사회적경제 비서관실을 두고 있음
 - 문제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함
-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7년 10월 범부처 종합대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발표

※ 사회적 경제 관련 주요 정책

- 문제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과제) (2017.7.19)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2017.7.25)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일자리위원회) (2017.10.18)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일자리위원회) (2017.10.18)
- 2018 경제정책방향(경제패러다임의 전환) (2017.12.27)
-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02.02.)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의 역할 제고 필요

-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거 공약, 정책 및 입법 활동을 비롯하여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립함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사회적경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정부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당 또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필요함

II

민주당 사회적경제 활동 현황

□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2014.2월)

- (목적)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민주당 상설위원회¹⁾
 -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 수행
 - 이와 함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비롯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추구 등 사회적경제 활동 전반에 관한 당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1) 2018.8.25. 개정 전 <당헌> 제44조(사회적경제위원회) 및 <당규 제6호> 중앙조직규정 제2조 제1항 참조.

- **(구성)**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상임부위원장을 포함한 87명의 운영위원, 7명의 지도위원, 32명의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됨
 -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크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나 운영위원회 위임사항을 심의·실행하는 집행기관으로 구성됨
 -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산하에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고 있음
- **(경과)** 2013년 태동기, 2014년 1기(위원장 신계륜), 2017년 2기(위원장 진영)
 -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2013년 국회사회적경제연구포럼을 발족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2015년 제1기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출범하여 현재 제2기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음

- 2013. 05월: 국회사회적경제연구포럼(대표:신계륜의원) 발족 및 활동
- 2014.02.26: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위원장 신계륜) 출범
- 2015.02.08: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에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당 상설위원회로 설치 의결
- 2015.04.21: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신계륜) 1기 출범
- 2017.02.28: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영) 2기 출범

□ 사회적경제 선거공약 개발 활동

- 18대 대선을 시작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마련 선거공약 제시
 - 18대 대선(2012) :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 구축」
 - 일자리 창출(청년사회혁신가 등), 지역공동체 복원 등 4대 공약 제시
 - 제6회 지선(2014) : 「기울어진 한국경제 사회적경제로 바로 잡겠습니다」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등 3대 공약 제시
 - 20대 총선(2016) :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등 10대 공약 제시

- 19대 대선(2017) :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경제시대를 열겠습니다」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6대 공약제시
- 제7회 지선(2018)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인 사회적 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 법적근거 마련,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등 3대 공약 제시

□ 사회적경제 입법 활동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 추진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 의원, 2016.8.17.): 국회 기재위 계류 중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김경수 의원, 2016.10.11./박광온 의원, 2017.10.26.): 국회 기재위 계류 중
 -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형수 의원, 2016.8.16.): 국회 환노위 계류 중

□ 사회적경제 당·정·청 협의회 개최

- 당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청 협의회 개최
 -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 2017년 7월 19일, 8월 24일, 2018년 2월 28일 세 차례 개최
 - 이와 함께 당·정·청 실무라인을 중심으로 실무전략기획회의 1회 개최
-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당·정·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 수행
 - 사회적경제 3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 의제를 정책과제로 추진하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 수행

□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설치(2018.1월)

- **(목적)**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 국가 비전을 정립하고 공공혁신과 사회혁신,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출범
 - 당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지원과 함께 연구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 사례 및 정책과제 발굴, 정책 대안 제시, 당·중앙정부·지방정부 사회적경제 단위 네트워킹 및 정책지원 및 홍보 등
- **(구성)** 센터장(공석)²⁾, 운영위원회(이회수 운영위원장), 정책자문단(송경용 자문단장), 사무국(민주연구원)으로 구성
- **(활동)**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생산하고, 당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추진단의 역할 수행
 - 사회적경제센터는 운영기획회의 7회, 당·정·청 실무 전략기획회의 1회, 공개토론회 2회 개최, 사회적경제 정책·선거공약 총람 발간 등의 활동 수행
 - 공개토론회: (제1회)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창출방안, (제2회)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연계 방안

2) 초대 센터장은 김영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겸임

III

민주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1. 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조직 정비 및 역할 강화

□ 사회적경제 관련 당 규정 정비

-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 및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함께 그에 따른 당규 및 내규 정비가 필요함
- 최근 민주당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당 강령 및 당헌·당규에 수정·보완함³⁾
 - 당 ‘강령’ 본문에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 공동체 발전’ 항목을 신설하고 관련 내용 반영
 -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기존 상설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당헌 제32조 및 당규 제6호 제28조 참조)

※ 더불어민주당 <강령> : 사회적경제 관련 신설 내용

5. 경제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공동체 발전)
계층, 세대, 지역 간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복지·주거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 중 하나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한다. 사회적금융 조성, 공공기관 사회책임조달 강화 등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협력 동반자로서 시민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공동체 기반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다양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역 재생과 지역순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3)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마련한 당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은 최고위원회(8.10일)와 당무위원회(8.17일)를 거쳐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8.25일)에서 통과됨. 이에 앞서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는 ‘민주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18.7.18. ‘사회적경제 당정청 협의회’에 보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내용을 반영하는 강령 및 당헌·당규·내규 개정을 제안하였음

- 강령 및 당헌·당규에서 위임한 사회적경제위원회 조직 구성 및 운영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내규 제정 추진
 -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44조(사회적경제위원회) 제4항의 위임 규정⁴⁾에 따라 운영위원회, 당정청 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 등을 담은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

□ ‘사회적경제 당정청 협의회’ 정례화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 사회적경제위원회 주관 당정청 협의회 분기별 개최 정례화
 -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협의
- 사회적경제 당정청 실무전략기획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당정청 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
 - 실무전략기획회의는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주관

□ 사회적경제위원회 상근 인력 역량 강화

- 최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증대와 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상 강화⁵⁾에 따라 당 사무처 상근 인력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를 당과 정부에 연결하는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함에 따라 이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조직 필요

4) 2018.8.17. 당무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의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44조 제4항 참조)

5) 2018.8.25.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기존 상설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로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당헌 제32조 및 당규 제5호 제28조 참조)

- 현재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지원 업무는 당 자치분권국에서 맡고 있으나 전담 지원 인력 없이 복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⁶⁾
 - 자치분권국 인원은 부서장 포함 4명으로 다양한 위원회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사회적경제위원회만 전담하여 지원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함
 - 자치분권국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전국노인위원회(전국실버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등의 업무를 지원
- 따라서 자치분권국내에 전담 부국장제를 도입하거나 별도의 독립부서를 신설하여 전담 인력 보강이 필요함
 - 해당 부서는 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총괄
 - 조직구성은 전담 독립부서(을지원국)와 인력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당 을지로위원회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⁷⁾

□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강화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산하에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를 상설기구로 의무화 및 관련 내규 제정 등을 통한 실효성 강화가 필요함
 - 당규 제6호(지방조직규정) 제26조와 제62조에 따라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35조⁸⁾에서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목적을 제시함
- 특히,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성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장과의 당정협의를 정례화하여 사회적경제를 중요 의제로 협의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참여 활성화
 -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가 필요함

6)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76조(자치분권국)

7) 을지로위원회 지원업무는 기존에 중앙당 민생지원국에서 담당(전담 부국장제)하였으나 2018.8.17. 당무위원회에서 별도의 독립부서(을지원국)를 신설하는 내용의 당규를 개정함(당규 제5호 제82조 참조)

8) 당규 제6호 제35조(사회적경제위원회) 시도당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관련 정책의 수립,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당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둔다.

2. 민주당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사회적경제 민·관네트워크, 당·정협의, 교육 및 정책연구 등의 역할 수행
 - 중앙당과의 교류협력, 지방정부간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을 위한 사업,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활동 수행 등을 통한 지방정부협의회 역할 제고
-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성과 홍보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서 지방정부협의회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자체장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당연직 회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광역단체장(시도지사)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로 확대
-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임원 및 회원은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임원 및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평가 인센티브 부여

□ 선출직 공직자 평가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활동 실적 반영

-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 활동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 활동 실적을 당헌·당규에 반영

<당헌>

제36조(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①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를 위하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자치구 시·군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평가한다.

③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

제70조(평가기준) ①선출직공직자의 평가기준은 평가대상에 따라 구분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구 국회의원 : 의정활동, 공약이행, 선거기여도, 지역활동, 다면평가, 여론조사
2. 비례대표 국회의원 : 의정활동, 다면평가
3. 광역·기초단체장 : 직무활동, 공약이행, 자치분권활동, 여론조사
4. 광역·기초의원 : 의정활동, 지역활동, 자치분권활동, 다면평가

-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마련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지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표1, 표2 참조)
 -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임명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 지표체계 틀 내에서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확대
 - 선출직공직자 평가기준 또한 기존의 활동내용에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서 평가

〈표 1〉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지표

현행		개편(안)			
공기업 = 준정부		공기업		※	준정부
경영관리 (50)	사회적 책임 등 (19) 일반 경영관리(31)	경영관리 (55)	사회적 가치 (30) 일반 경영관리(25)		경영관리 (45) 사회적 가치 (28) 일반 경영관리(17)
주요사업 (50)	안전·환경 등 (공10~15/준25~30) 기타 주요사업 (공35~40/준20~25)	주요사업 (45)	사회적 가치 (10~15) 기타 주요사업 (30~35)		주요사업 (55) 사회적 가치 (30~35) 기타 주요사업 (20~25)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방안, 2017.12.28.

〈표 2〉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반영 세부 평가지표

'17년		'18년 개편안			
구 분	배점	구 분	공기업	준정부	비 고
I. 경영관리	50	I. 경영관리	55	45	
1. 경영전략·사회공헌	18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 전략기획·사회적 책임	5	• 전략기획	2		경영목표 및 전략 수립 등
• 경영혁신	3	• 경영개선	2		경영개선계획 수립·이행, 기능조정 등
• 국민평가	2	• 리더십	2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도 등
• 열린혁신	1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20	
• 경영공시	1	• 일자리 창출	7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현원차관리, 민간일자리 창출 등
• 정부권장정책	6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	3	고졸자 지역인재·여성관리자 확대 등
2. 업무효율	5	• 안전 및 환경	3		산업재해관리, 에너지 절약 등
3. 조직·인적자원 관리	4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업체 적기 자금결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4. 재무예산 관리	10	• 윤리경영	3		윤리경영체계, 경영투명성 등
• 재무예산 운영·성과	8	3. 업무효율	5	—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
• 자구노력 이행성과	2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6	
5. 보수·복리후생 관리	13	• 조직·인사 일반	3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 보수·복리후생	6	• 재무예산 운영·성과	5	2	재무건전성 관리 등
• 총인건비 관리	3	• 삶의 질 제고	1		육아휴직, 장시간 근로해소 등 일·가정 양립
• 노사관계	4	5. 보수 및 복리후생비	8		
II. 주요사업(50)	50	• 보수·복리후생	3		합리적 보수체계 운영 등
• 주요사업의 계획·활동·성과를 종합 평가	50	• 총인건비 관리	3		총인건비 인상을 준수 여부
〈합 계〉	100	• 노사관계	2		노사간 공감대 형성,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 등
III. 일자리 가점	10	6. 협력과 참여	5		
		• 국민참여	1		참여·혁신·협업 우수사례 가점 (1점)
		• 열린혁신	1		
		• 국민소통	3		고객만족도 조사, 알리오 공시
		II. 주요사업	45	55	
		•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10~15	30~35	
		• 기타 주요사업	35~40	20~25	수익성 또는 중립적 사업
		〈합 계〉	100	100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방안, 2017.12.28

□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 반영

-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출 서류에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및 공약이행 계획서가 포함되도록 의무화
-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2018년 6.13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 당시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중앙당 및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한 바 있음

<당규 제10호>공직선거후보자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

제29조(제출서류) ①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3. 의정활동계획서(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지방자치단체의 장) 1부

4.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 입법 및 조례 제정 지원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전략
 -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의 투-트랙(two track)으로 접근
 - 사회적경제 3법은 대부분 발의된 지 2년 정도가 될 정도로 법안 통과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반면, 지방의회는 대부분 여대야소 상황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조례안을 상대적으로 쉽게 제정할 수 있을 것임

○ 전국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수집 및 표준조례안 제시

-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관련 표준조례안 마련
- 표준조례안 마련을 위해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및 사례 등을 수집하여 아카이브화
- 특히, 표준조례안은 사회적경제 3법을 참고하여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마련

□ 사회적경제 우수 정책사례 발굴 및 교육홍보

○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우수 사례 발굴 및 아카이브 구축

-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우수사례 발굴은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역할은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가 수행
- 특히, 사회적경제 관련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 발굴, 확산 및 공유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 엑스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

○ 당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제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당원, 당직자, 공직출마자, 당 지도부 등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정책역량 제고
-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주제로 시·도당 당원연수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전문가들의 강의 진행
- 새로운 대안 경제모델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네트워크 강화

- 중앙당 및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등과의 협력 및 정책 교류 기반 구축
 - 해당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공약 개발 참여, 사회적경제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 연구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네트워크 강화
 -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하는 주기적인 오픈 정책연구 그룹을 형성해 현장 기반의 연구 추진

민주당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